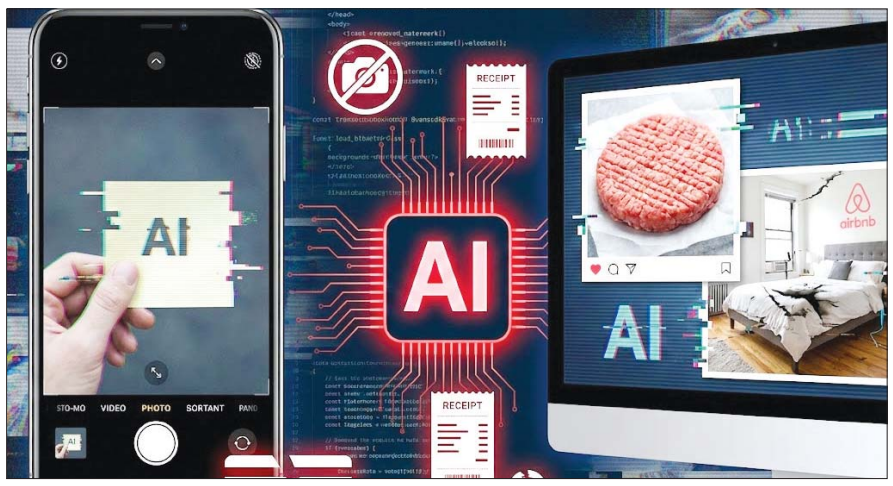
AI 사진위조, 일상 속 피해 잇따라… 새로운 검증 시스템 절실

제도·인식, AI 발전속도 못따라가
플랫폼 대응에도 AI 기술로 무력화

AI 생성물 워터마크 삽입 의무보다
기술표준·법적기준 함께 정비해야
플랫폼 차원 필터링으론 한계 명확



AI 그래픽 편집 기술이 발전하면서 초고난도의 합성도 일반인이 간단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악용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논란이다. /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카메라를 구매하려던 김여름(가명) 씨는 정교한 인공지능(AI) 이미지에 속아 거액을 사기당했다. 판매자가 포스트잇에 이름과 날짜를 적어 물건과 함께 찍은 '인증샷'을 보냈기에 의심하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 타인의 사진에 AI로 포스트잇을 합성한 것이었다. 김 씨는 "위화감이 전혀 없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소상공인들도 AI의 표적이 됐다. 수제 햄버거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최근 '패티가 덜 익었다'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했다. 조리 공정상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손님이 보내온 사진 속 패티는 AI로 조작된 듯 정교하게 덜 익은 모습이었다. 김 씨는 "합성이 의심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토로했다.

7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챗GPT, 제미나이 등 이미지 생성 AI의 편집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이를 악용한 범죄가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구글의 '제미나이 2.5 플래시(나노 바나나)' 모델은 이미지 속 인물과 사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능력이 뛰어나 악용되고 있다. 과거 포토샵 등 전문 기술이 필요했던 사진 조작이 이제는 초보자도 몇 초 만에 실행할 수 있는 '대중적 사기 수단'이 된 것이다.

악용 사례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AI로 조작된 숙소 파손 사진을 제출해 수천 파운드의 허위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들통났다. 호주에서는 AI로 합성된 가짜 영수증과 송장을 이용한 세금 공제 및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공인부정조사협회(ACFE)는 전 세계 보험 조직이 매출의 약 5%를 이러한 사기로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

범죄가 교묘해지자 플랫폼들도 대응에 나섰다. 번개장터는 머신러닝 기반 사기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고, 중고나라는 AI 이미지 검수로 워터마크 식별과 파손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자들 역시 동일한 AI 기술을 활용해 방어망을 뚫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을 통해 AI 생성물에 가시적 식별표지(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영상물의 경우 재생 내내 워터마크를 노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IT 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며 반발한다. 단순 채색이나 오타 수정 등 보조적 도구로 AI를 쓴 경우까지 워터마크를 강제하는 것은 창작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가시적 워터마크는 AI를 이용해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실제로 구글의 제미나이조차 명령 한 번에 자사 워터마크를 지워 논란이 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표기 의무화보다는 메타데이터 암호화나 삭제가 불가능한 비가시적 워터마크 등 기술적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AI가 누구나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도구가 된 만큼, 기존 신뢰 체계를 대체할 새로운 검증 시스템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와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IT 플랫폼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진 위조 여부를 육안으로 가려낼 여지가 있었지만, 최근 AI 합성 이미지는 원본과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플랫폼 차원의 필터링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AI 이미지 사기는 특정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결제, 보험, 세무 등 신뢰를 전제로 한 모든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사후 책임을 플랫폼에만 지우기보다 기술 표준과 법적 기준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e스포츠 경쟁구도 'SOOP vs 치지직' 재편

LCK 중계권 구조개편… 유튜브 제외
SOOP, 기존 이용자 체류시간 유지
치지직, 스트리밍 플랫폼 정체성 굳히기

이달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 공식 대회인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중계에서 유튜브가 빠지면서 국내 e스포츠 중계 시장의 경쟁 구도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SOOP(숲)과 치지직이 사실상 양강 체제로 전환되며, 단순 중계를 넘어 플랫폼 체력과 시청자 충성도를 가르는 진검승부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그간 LCK 중계는 유튜브라는 범용 플랫폼을 중심으로 트래픽이 분산되는 구조였다.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가 시청자 유입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개별 플랫폼의 체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중계권 구조 개편으로 유튜브가 빠지면서, 실시간 시청자 유입과 체류 시간을 온전히 흡수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경쟁의 초점도 '중계 가능 여부'에서 '시청자를 얼마나 오래 붙잡을 수 있느냐'로 이동했다. 중계권을 확보한 플랫폼은 늘어난 반면, 시청자 파이는 제한적인 만큼 플랫폼 간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SOOP은 오랜 기간 e스포츠 중계를 통해 축적한 스트리머 생태계와 충성도 높은 시청자층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LCK를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 문화와 후원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SOOP이 기존 이용자의 이탈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체류 시간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치지직은 성장 국면의 플랫폼답게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택했다. 네이버 포털과의 연계, 검색 노출, 로그인 기반 접근성은 치지직의 가장 큰 무기다. 여기에 클립형 콘텐츠와 하이라이트 소비를 통해 LCK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시청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치지직은 LCK 중계를 단순 이벤트가 아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정체성을 굳히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플랫폼 내부에서는 LCK를 중심으로 스트리머 유입과 콘텐츠 생산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를 실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즌 LCK 중계가 단순 시청 수 경쟁을 넘어, 플랫폼의 지속 시청률·커뮤니티 활성도·광고 상품 경쟁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스포츠 업계 관계자는 "이번 LCK 중계는 단기 트래픽보다 시청자 잔존율과 플랫폼 록인 효과가 핵심"이라며 "SOOP과 치지직 중 어느 쪽이 장기 체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가 이번 시즌을 통해 명확히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카카오모빌리티, 운전자 노조와 단체협약

대리운전·퀵서비스 근로환경 개선

카카오모빌리티는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와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렸으며, 김태현 카카오모빌리티 에이전트사업실 상무와 이상국 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측은 노동기본권과 경영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진행된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김태현 카카오모빌리티 Agent사업실 상무(오른쪽)와 이상국 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고충처리제도 운영, 안전보건 활동 강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공동으로 나선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며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中 AI 모델 기술종속 우려 부인

"비공개 기술 무단차용 사례 아닌
공개 오픈소스 모델 활용한 것"

네이버가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활용 논란에 대해 "비공개 차용이 아닌 공개 오픈소스 활용"이라며 기술 종속 우려를 부인했다.

논란이 기술 선택을 넘어 AI 주권과 산업 전략 문제로 확산되자, 네이버가 선제적으로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7일 IT 업계에 따르면 AI 업계와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이버가 중국계 AI 모델을 일부 서비스에 활용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기술 선택을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이 확산되며, 기술 종속과 보안 우려가 동시에 불거졌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비공개 기술을 들여오거나 무단 차용한 사례는 없다"며 "글로벌 시장에 공개된 오픈소스 모델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국가의 기술을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성능과 비용, 개발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현재 자체 AI 모델을 중심으로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영역을 단일 모델로 해결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 목적에 따라 외부 오픈소스 모델을 병행 활용하는 전략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AI 기업 전반이 직면한 현실을 드러낸 사례로 보고 있다.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기술 스택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과 조합의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 AI 기술을 둘러싼 보안·윤리 이슈가 여전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네이버가 적용 범위와 활용 목적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최빛나 기자

LG CNS, 국방 IT 사업 연이어 수주

국방정보화 안정적 운영 지원

LG CNS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유사통신망 네트워크 통합사업'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차세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유사통신망 네트워크 통합사업은 육·해·공군과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네트워크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목표다. LG CNS는 약 15개월간 사업을 수행하며, 각 군의 네트워크 환경을 표준화하고 중복 설치된 장비를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1대1 연동 구조로 복잡했던 정보 공유 체계를 단순화하고, 정보 흐름을 일원화한다.

이번 사업에는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SDN) 기술을 적용해 전국에 분산된 라우터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디도스(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장비,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 인프라를 고성능 장비로 전환하고, AI 기반 통합보안관제 솔루션을 도입해 비정상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대응할 예정이다.

차세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국방시설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시설의 기획·설계·공사·운영·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LG CNS는 온나라2.0, 국방재정정보체계 등 12개 내부 업무시스템과 공공마이데이터,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등 8개 외부 시스템을 연계해 국방시설 관련 업무를 통합한다. /김서현 기자